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중 체고(키) 40cm 이상인 반려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 의무 규제에 관한 법률적 검토>

-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모든 40센티 이상 체고의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규정하고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행정입법의 법적 타당성, 위법성에 대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1. 18.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중 관리대상견 규정 및 입마개 의무화 규제(이하 ‘이 사건 체고 기준 입마개 규제’라고만 함)는 체고 40cm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제의 근거 법률로 들고 있는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를 입법 취지로 하고 있음을 제1조에서 밝히고 있고, 동물의 본래의 습성을 존중하며 불편함을 겪거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제13조 제2항에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는 바, 모든 개를 대상으로 단순히 체고 기준으로 입마개를 씌울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입법은 모법인 동물보호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행정 입법으로써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

기본권 제한의 위헌성 심사기준인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보건대, 체고와 공격성향은 무관하고, 개가 무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개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상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은 체고만을 기준으로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없는 바,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체고기준 입마개 규제에 의하면 일부 소형견을 제외한 모든 개가 해당되므로 외출시 대부분의 반려견에게 공격성향과 무관하게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며, 기본권 주체들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해당 반려견의 견주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일제히 입마개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 법규 시행으로 실제 달성하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당하는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의 제한이 더 클 수밖에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잃었다.

한편, 외국의 입법례를 보건대, 전세계적으로도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입마개까지 착용시키도록 하는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견종이나 개체별 공격성을 기준으로 판단된 위험견에 대하여 입마개를 착용을 의무화하는 경향이고, 독일의 니더작센주의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 등이 개를 키울 때 부과할 수 있는 여러 조치 중의 하나로 입마개 착용이 들어가 있을 뿐이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 18. 발표한 반려견안전대책 중 체고 40센티 이상의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 규제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행정입법이며, 해외에서도 같은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입법례가 될 것이다.